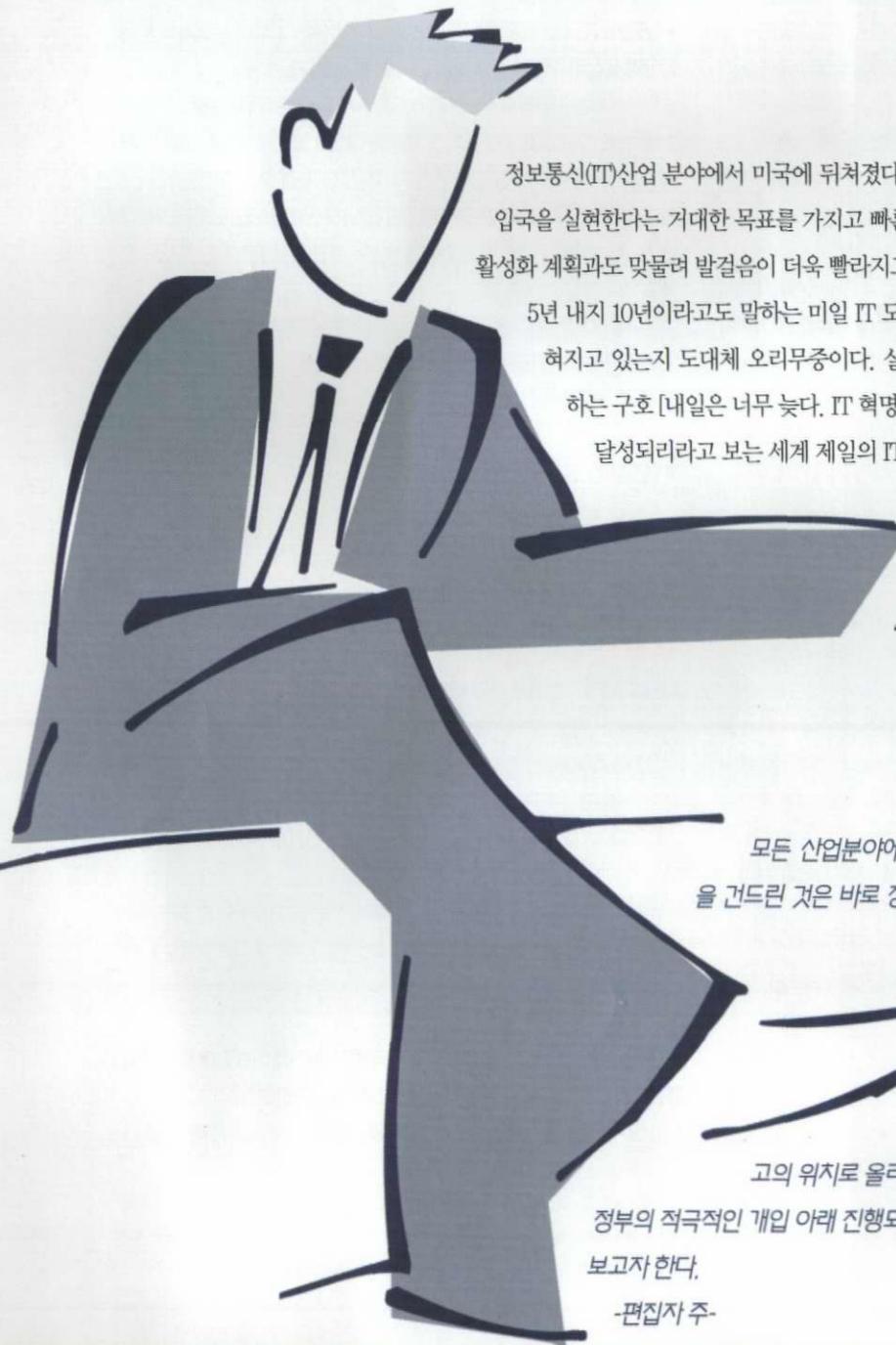




미국과 일본의 IT 격차를 좁히는 다섯가지 조언

日, 2005년까지 세계 제일의 IT입국 실현 목표

정보통신(IT)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뒤쳐졌다고 생각한 일본은 2005년까지 세계 제일의 IT입국을 실현한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IT 산업 활성화 계획과도 맞물려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5년 내지 10년이라고도 말하는 미일 IT 도입 활용의 격차는 넓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좁혀지고 있는지 도대체 오리무중이다. 실상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하는 구호 [내일은 너무 늦다. IT 혁명] 정책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 버려 2005년에 달성되리라고 보는 세계 제일의 IT입국의 목표도 불안하기만 하다. 재일 미국 상

공회의소 전 회장, 일본 케이デン스 디자인 시스템사의 글렌 S. 후쿠시마 사장에게 일본의 IT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향한 5가지의 “꾸짖음”을 들었다. (구성 : 후지다 세이시)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임을 자부해오던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바로 정보통신 산업이다. 일본 자체 내에서도 정보통

신 분야는 미국과의 격차를 5년에서 10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 정보

통신 부분에서의 뒤쳐짐을 자인하면서도 일본은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라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정보통신 산업의 계획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Interview

글랜 S. 후쿠시마 사장

■ 일본은 IT 도입 초기 형태를 갖추려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클린턴 정권 발족 직후인 1993년 미국의 인터넷은, 이제 막 시작되는 여명기로 학자나 기술자 모두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사내 전자 메일 사용에 물러 있었다. 사외에서도 전자메일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해인 1994년이며, 미국에서 IT 산업이 비즈니스를 포함해 일반화되어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라 기억 된다.

지금은 일본국간의 IT 보급의 격차나 일본의 대응이 뒤쳐지는 것에 대항하여 정부와 기업 모두가 각성해 (IT 혁명)이 유행어가 되었다.

나 자신도 AT&T에 재직하면서 인터넷이 대표하는 IT의 여명기와 그 후의 성장기, 발전기를 보고 느낀 것은 IT가 일본 경제에 크게 공헌할 가능성을 있다는 점이다.

정보 기술에 관해서는 미일간의 차이는 그다지 없는데 왜 격차가 생기는 것일까? 일본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가 IT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앞으로의 IT 보급과 전개의 흥미로운 테마다.

■ 처음부터 민간주도노선으로 도화선을 지핀 미국의 IT 사정에 대해서 시장의 경쟁 원리로 말한다면 미일간에 IT 도입과 보급 과정에 큰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IT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섯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차이다. 일본은 중앙 의존형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 대표적인 예가 클린턴 정권 발족 직후 당시의 고어 차기 대통령이 제창한 정보 슈퍼 하이웨이 구상일 것이다. 정부가 제창해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도 참가했던 것으로 기억이 선명한데 1992년 11월 대통령 경제 전문가가 모여 2일간에 걸쳐 신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검토하는 경제 회의가 열렸다.

당시 내 상사였던 AT&T사 회장겸 CEO의 밥 알렌과 고어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교환되었다. 논점 중에 하나는 고어가 (정보 슈퍼 하이웨이 구상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알렌 회장의 (민간주도노선)이 회의의 총의를 얻었다. 일본은 (5년 후에는 미국을 추월해 제일의 IT 입국이 된다)라는 중앙 정부주도형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미국과 같은 “시장원리”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 기업우선인가, 소비자 우선인가. 미일의 발화점이 본래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논리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에서는 유저, 혹은 소비자의 논리나 이익이 일본보다는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총무성(구 우정성)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양 정부의 시책에 차이가 선명하다. 총무성은 과거 10년에 걸쳐 시장의 자유화, 국제화를 도모해 경쟁의 중요성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테마는 통신, 위성, 방송업계의 육성이 중심인 것 같다.

FCC의 목표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에 있고, 기업의 유저를 포함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쟁원리를 촉진시킨다는 자세가 강하다.

양국의 통신 정책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총무성이나 NTT가 주역인 일본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통신 시장에 영향력을 가진 것은 경쟁정책을 중시하는 유저의 입장을 주장하는 FCC와 사법부의 반 트러스트국(기업 합동, 위탁 신탁),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이다.

일본에서도 작년 가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IT 분야 경쟁정책상의 제언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 15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는 ‘NTT의 본연의 자세’론에서 시장의 성장과 육성의 순서에 문제점이 숨어 있는 것인가?

일본에서는 공급측의 대표 NTT의 이익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미 통상 대표부에 들어간 1985년 4월 1일이 NTT (민영화)의 첫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선명하다. 그 후 15년에 걸쳐 NTT 본연의 자세가 논의되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총무성은 NTT의 상황을 2년 정도 관찰해서 본격적인 경쟁원리에 밀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경쟁논리를 시장으로 돌리는 것이 고품질, 저가격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해 85년 이후 NTT 분할을 주장했던 것이다.

■ 왜 이러한 상황이 정착된 것인가.

하나는 일본의 통신기기 메이커에 따라서 NTT는 거대한 유저라는 것. 또 국가 전략의 시점에서 NTT를 일본의 통신업계의 “National Champion”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대조적인 것이 미국 AT&T사 분할 케이스다. 1982년에 재판소에서 사법부와 싸운 결과 사법부와의 합의에 의해 1984년에 7개의 지역 전화회사와 AT&T 본체로 분할되었다. 그 후 1995년에는 자발적으로 본체를 3분할했다. 최근에는 4분할한다고까지 들었다.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 전략을 위해 NTT라는 기업을 존속시키려는 관점과, 시장원리 아래서 자유 경쟁을 촉진시켜 유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 AT&T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려는 관점은 대조적이라 생각한다.

IT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차이하고 싶다. 일본은 하드웨어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콘텐츠로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IT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미국 소극적인 일본이라는데 대한 견해와 IT를 받아들이는 사회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일반적으로 사회가 IT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관점에서 말하겠다.

1999년 봄,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즈의 토마스 크리드먼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가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는 (세계의 냉전구조가 붕

괴된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의 구조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생겼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IT다)라고 밝히며 명쾌하게 IT산업의 중요위치를 부여했다. IT에 있어서 개인의 생산성,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성장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도 정부 기능도 모두가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왜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었는가? IT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국가나 기업, 개인도 IT의 특혜를 향유할 수 있는 IT의 실증적인 명확함이 있다. 사회 일부에서는 너무 명확하다는 이유로 IT는 만사형통이다 라고 종교와 같이 신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권장되었던 것이 이유일 것이다.

물론 IT에는 사이버 테러리즘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90%는 실증적이고, 나머지 10%는 법률이나 정책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저에 있다.

(귀하에게 인터넷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게재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기사 질문인데 (쉽게 전자 상거래나 쇼핑을 할 수 있다), (손쉽게 집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집에서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다) 등 100%가 실증적인 대답이었다.

일본의 IT는 저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 기우일련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들리는 인터넷 관련 뉴스의 대부분이 범죄와 연관된 것 같다. 더욱이 일본의 매스컴은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때문인지 IT에 대한 자세가 미국과 비교해서 소극적으로 보인다.

■ 30년 만에 실업률 3.9 ~ 4.1 %를 유지하는 미국의 사정과 실업 파산 도산의 불안이 감도는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

이전에, 일본에서 경영 컨설팅을 했을 때도 일본의 IT에 대한 소극적인 실태를 경험했었다. 이전부터 일본기업이나 업계 단체의 요청으로 미일 IT비교론 등을 주제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 중에 30% 이상은 IT 도입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통설이다)라고 말하자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IT를 도입하면 종업원의 중간층이나 유통기구에 대량 실업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반론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상당수의 실업자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반면 IT 도입에 따른 실업자수를 상회하는 고용이 창출되었다. 내가 경험한 앞의 AT&T사는 과거 대규모의 디운사이징을 실시했다. 이 예에서도 다른 우량 통신기업, IT관련 기업, 벤처기업에 고용조건이 좋은 전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동성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수년동안 30년만의 실업률이 3.9 - 4.1%이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IT를 도입하지 않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IT도입을 걱정하는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건해는 IT 사정의 핵심의 하나를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1999년에 인텔사의 CEO인 앤드류 글로브는 어느 회의석상에서 (지금이야말로 인터넷 관련기업이라는 말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사라지는 말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며 모든 기업은 인터넷을 전화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했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데 특수한 마케팅 포지션에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 글로브가 한 예언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차이점은 일본 정부 관련 강연회에서 들은 (일본에서 인터넷이 보급되면 중소 기업이 커다란 충격을 받아서 경영부진이나 도산할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다. 미국의 인식은 이와 반대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기장 특혜를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작아 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IT를 활용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바꾸어 말하면 “규모의 경제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IT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아주 많다.

■ 일본의 중소기업은 적절한 IT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가?

노동시장의 유동성도 있고 패지부활의 가능성도 있는 환경 미국 중소기업과 그러한 선책지가 한정되어있는 일본의 중소기업의 차이라 말해도 좋을성 싶다.

IT를 활용하면 적어도 비용은 산감할 수 있다. 업무처리 효율이 상승된다. 이것이 제일의 목적이 되면 중소기업이 IT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혜는 클 것이다.

그러나 IT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 통신비용이 비싸다.
 - PC 보급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
 - 크레디트 카드 침투율도 낮다.
 - 고령자들은 키보드에 대한 저항감이 높다.
 - 범죄방지를 위한 법의 정비도 아직 불충분하다.
- 이러한 제반의 사회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 만약 내가 정부 IT 보급담당이라면?

NTT 분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어디서부터着手해야 할 것인가?

IT 유효이용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결하다. 그 경쟁을 확보하고 촉진하는 구조 만들기가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책은 다양하다. 이 점은 미국이나 유럽 및 아시아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NTT분할론을 들었는데 만약 일본에 경쟁의 구조가 만들어져 그 구조가 촉진되는 환경이 정비된다면 분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 Computopia)